

부록
해외의
지역발전정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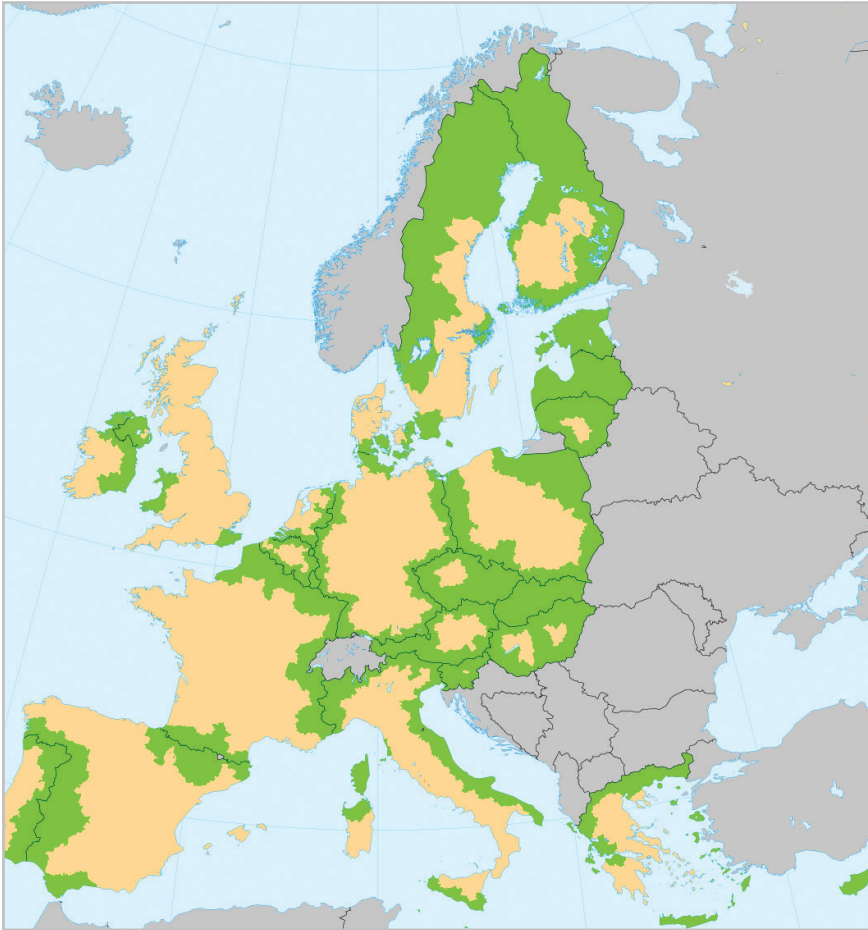
글로벌 메가시티리전(Mega-City Region)

메가시티리전은 글로벌 경쟁에 필요한 규모 이상의 경제적 투입요소와 시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경쟁이 가능한 대도시 지역을 말한다. 전 세계에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20개 메가시티리전이 존재하며, 우리나라는 경인권과 부울경권의 2개 권역이 이에 포함된다.



20대 메가시티리전을 대상으로 경제적 번영, 장소 매력도, 연계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10개의 1순위 그룹(2개의 글로벌 톱과 8개의 선도그룹)과 10개의 2순위 그룹(3개의 잠재적 선두그룹과 7개의 후발그룹)으로 경쟁구도가 나누어진다. 우리나라 경인권은 11위로서 잠재적 선두그룹에, 부울경권은 14위로서 후발그룹에 속하여 모두 1순위 그룹에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2개 권역 모두 선도그룹에 포함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취약한 혁신인프라의 강화, 삶의 질 여건 개선, 교통인프라의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럽의 지역협력정책



- ◀ 접경지역 협력
- ▼ 초국가적 협력



유럽연합은 인종, 전통, 인구규모, 산업구조가 다른 27개 회원국을 경제사회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결속정책(cohesion policy)을 강력히 펼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결속정책(2007-2013)은 3가지 목표를 추구한다. 첫 번째 목표는 수렴(convergence)이다.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발전 격차를 해소하는 것으로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지역경쟁력과 고용(regional competitiveness and employment)이다. 이는 치열해지는 국제경쟁 환경 속에서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목표는 유럽지역협력(European territorial cooperation)이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협력을 통해 유럽의 국가·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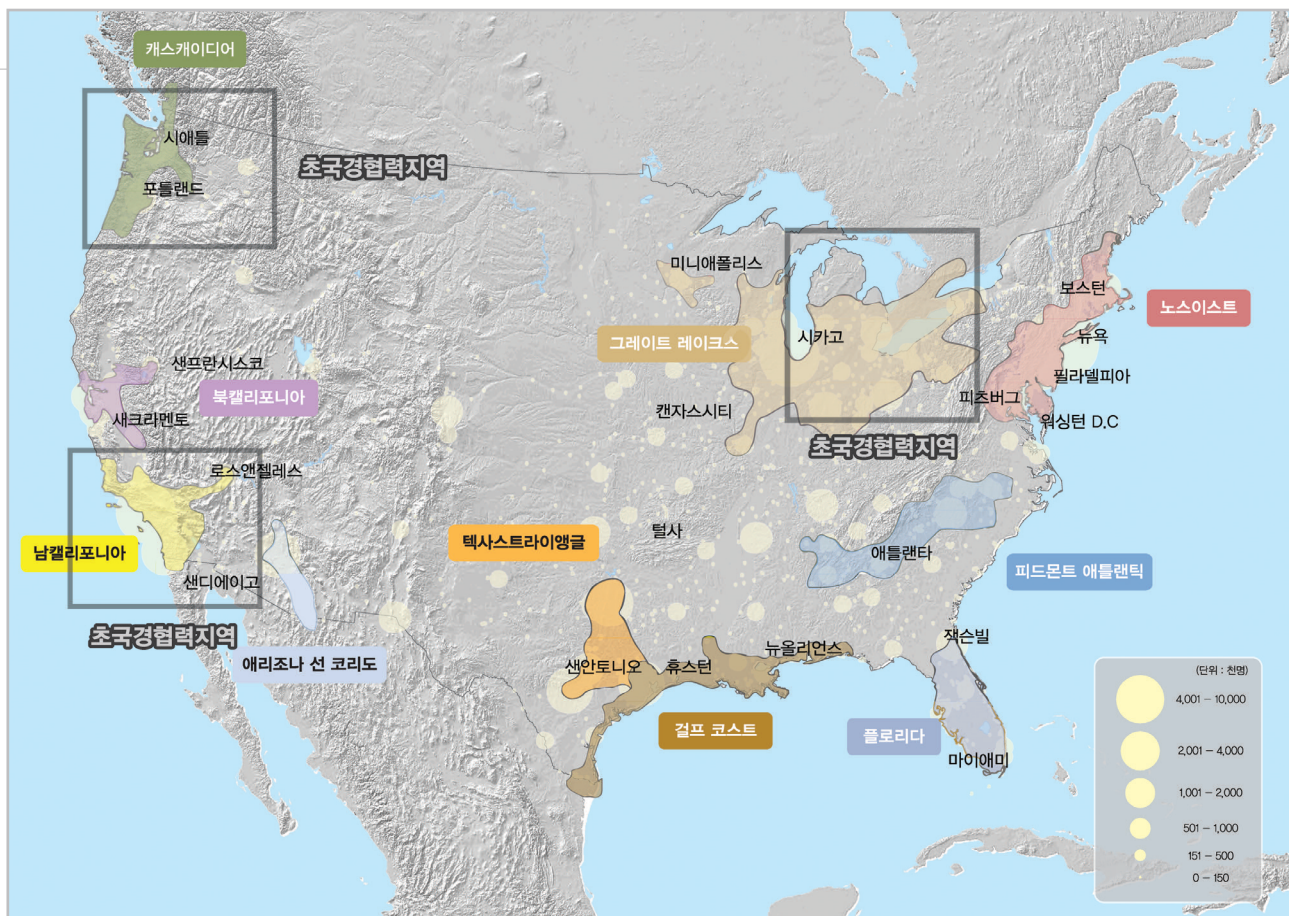
유럽지역협력 목표는 3가지 차원에서 추구하고 있다.

- **접경지역 협력**(Cross-border cooperation)
육상 또는 해상 국경선 150km 이내에 있는 지역들 간의 연계협력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현재 52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 **초국가적 협력**(Transnational cooperation)
여러 국가들에 걸쳐 있는 초국가적 벨트로서 선 또는 다각형 형태로 나타난다. EU집행위원회가 지정한 13개 지역이 대상지역이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발틱해, 대서양해안, 지중해, 알프스 협력지역 등이 있다.
- **지역간 협력**(Interregional cooperation)
EU 회원국 모든 지역과 노르웨이와 스위스 지역이 수혜대상이다. 이는 우수사례 등 정책경험의 교류에 초점을 맞추며 2009년 현재 41개 프로젝트가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혁신과 지식경제', '환경과 위험방지' 등이 주요목표다.

미국의 초국경·초광역 지역발전정책

미국은 11대 거대지역(Mega-Regions) 형성에 주목하면서 2050년에 대비한 초장기적 국가경쟁력 강화전략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특히 11대 거대지역 중 오대호와 캐스캐이디어(포틀랜드, 시애틀, 밴쿠버)에서 미국과 캐나다 사이 지형·환경·인프라 등을 공유하는 거대지역이 형성되고 있다. 남부 캘리포니아의 거대지역에서는 미국과 멕시코 간 초국경적 협력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는 침체에 빠진 미국경제의 해법으로서 대도시권 국가론(MetroNation)이라는 새로운 국토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는 미국의 대도시권이 국내총생산, 인구, 고용 면에서 탁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의 성장엔진이라는 사실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대도시 국가론은 국가 번영전략의 핵심요소인 혁신, 인적자본, 기반시설, 정주 환경에 관한 정책을 국가나 주정부가 아니라 대도시권 단위에서 계획하고 집행하도록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영국의 광역경제권정책

영국(England)은 지역정책에 광역경제권 전략을 도입한 선두주자이다. 1997년 잉글랜드를 9개의 경제권역으로 구분하면서 광역경제권 정책을 실시하였고, 2004년에는 북동부권, 북서부권, 요크셔·험버권 간 연계협력(The Northern Way)도 시행하였다. 런던권을 포함하는 9대 광역경제권의 인구는 평균 560만 명이며, 지역총부가가치는 평균 2,000억 달러에 달한다. 각 광역경제권의 정책은 1998년 본격 출발한 지역개발청(RDA)에 의해 주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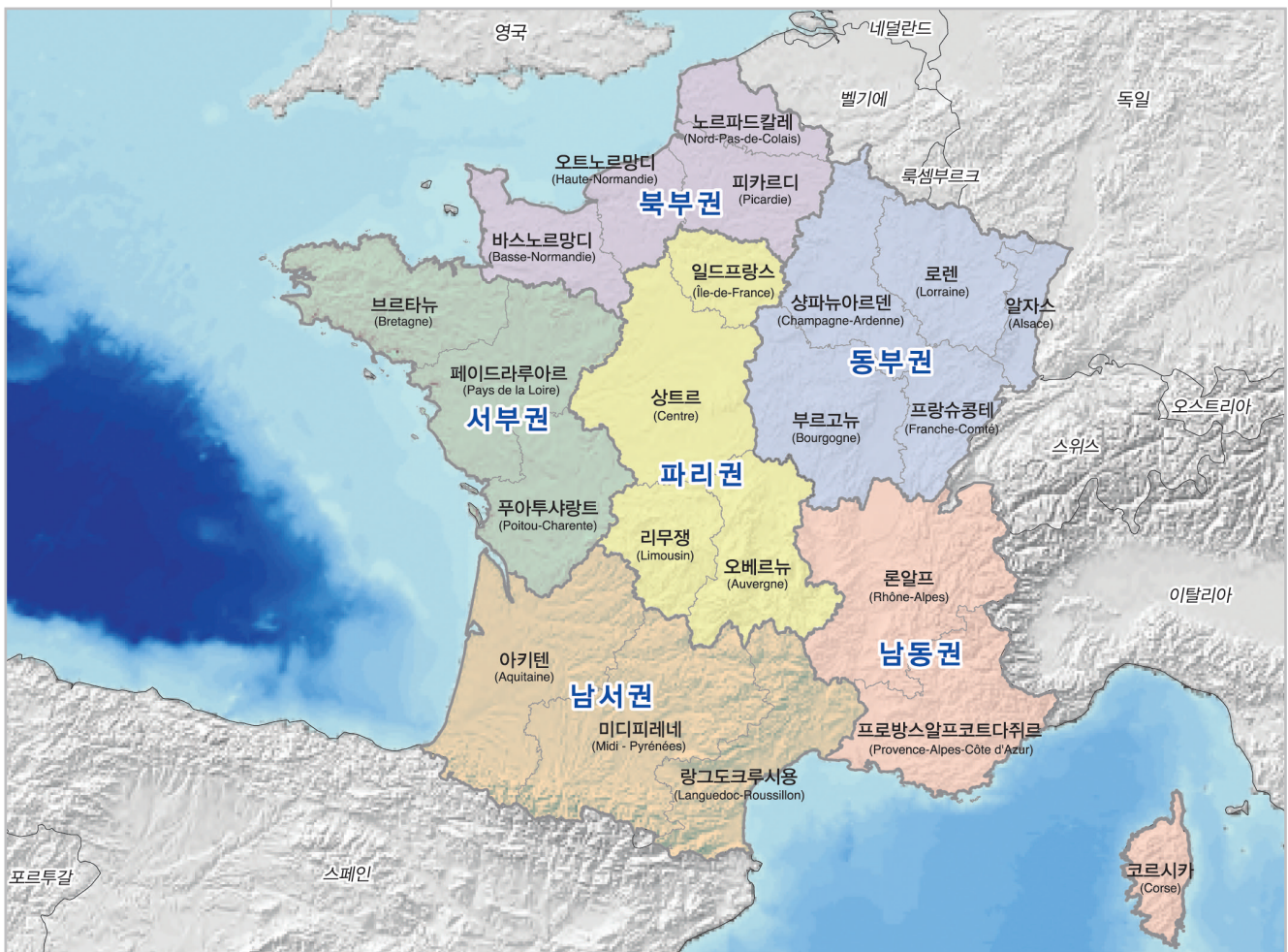
RDA는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두고 지역경제전략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결하는 광역경제권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이다. 우리나라의 광역경제권발전 위원회도 이러한 RDA를 참고하여 신설한 것이다. RDA의 예산조달 및 운영은 6개 중앙부처의 예산을 하나로 통합한 단일예산제(Single Pot)에 의해 자율적인 용도를 설정해 이루어진다. 최근 영국 RDA는 기존 지역경제전략에서 혁신, 투자, 사회적·물리적 재활성화를 포괄하는 지역공간전략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프랑스 Super-régions

프랑스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체계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이룬 모범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성공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개발과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광역적 지역발전정책으로 가능하였다. 즉, 기존의 도(데파르트망)를 확대하여 지역(레지옹)을 신설했는데, 이것이 프랑스의 광역경제권에 해당한다. 프랑스의 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은 여전히 발전·변모하고 있는데, 최근 전국을 6개 광역경제권, 즉 슈퍼지역(Super-régions)으로 설정한 2020년 장기발전구상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프랑스의 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은 중앙정부의 주도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지역 경제개발에 관해 협약을 맺는 계획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한다. 아울러 지역발전에 관련된 여러 기관 간 조정 및 협력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범부처 차원의 지역정책전담기구(DIACI)를 설치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 8대 광역권

2000년 이후 일본은 기존의 전국종합개발계획이 세계화, 지역간 경쟁의 격화,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국토형성계획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2005년 수립된 국토형성계획은 일본을 8대 광역권으로 구분하고, 전국계획과 광역계획을 분리하여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중앙정부는 전국계획을 통해 국토발전의 비전과 광역권별 공통과제 등 기본방향만 제시하고, 광역권별 발전비전과 전략 및 구체적인 연계협력 사업은 지역 스스로 담당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자율과 책임성이 강화되었다.



수도권을 비롯한 8대 광역권은 일극일축형 국토구조를 다극 분산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광역권별 자립적이고 특성화된 발전 전략을 담은 광역계획을 수립한다. 이러한 광역계획은 지역간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의 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일본 최초의 지역주도형 계획이라는 의의가 있다.